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9.4.(수) 14시 브리핑 시작 이후	배포	2024. 9. 4.(수)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연금개혁 추진계획」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❶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❷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❸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①노후소득 강화 ②세대형평 제고 ③재정 안정화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table>
<tr><th></th><th>자영업자</th><th>근로소득자</th><th>공무원 등</th></tr>
<tr><td>3층</td><td rowspan="2">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td><td colspan="2"></td></tr>
<tr><td>2층</td><td>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td><td>직역연금(183만명)※'22년말</td></tr>
<tr><td>1층</td><td colspan="2">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td><td rowspan="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td></tr>
<tr><td>0층</td><td colspan="2">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td></tr>
<tr><td>(빈곤층)</td><td colspan="3">(기초생활보장제도)</td></tr>
</table>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❶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❷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❸ 기금수익률 제고 : 1%p + α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❹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❶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❷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❶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❷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❸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299인) 78.2% > **(30인 미만) 23.7%**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23.7~)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❹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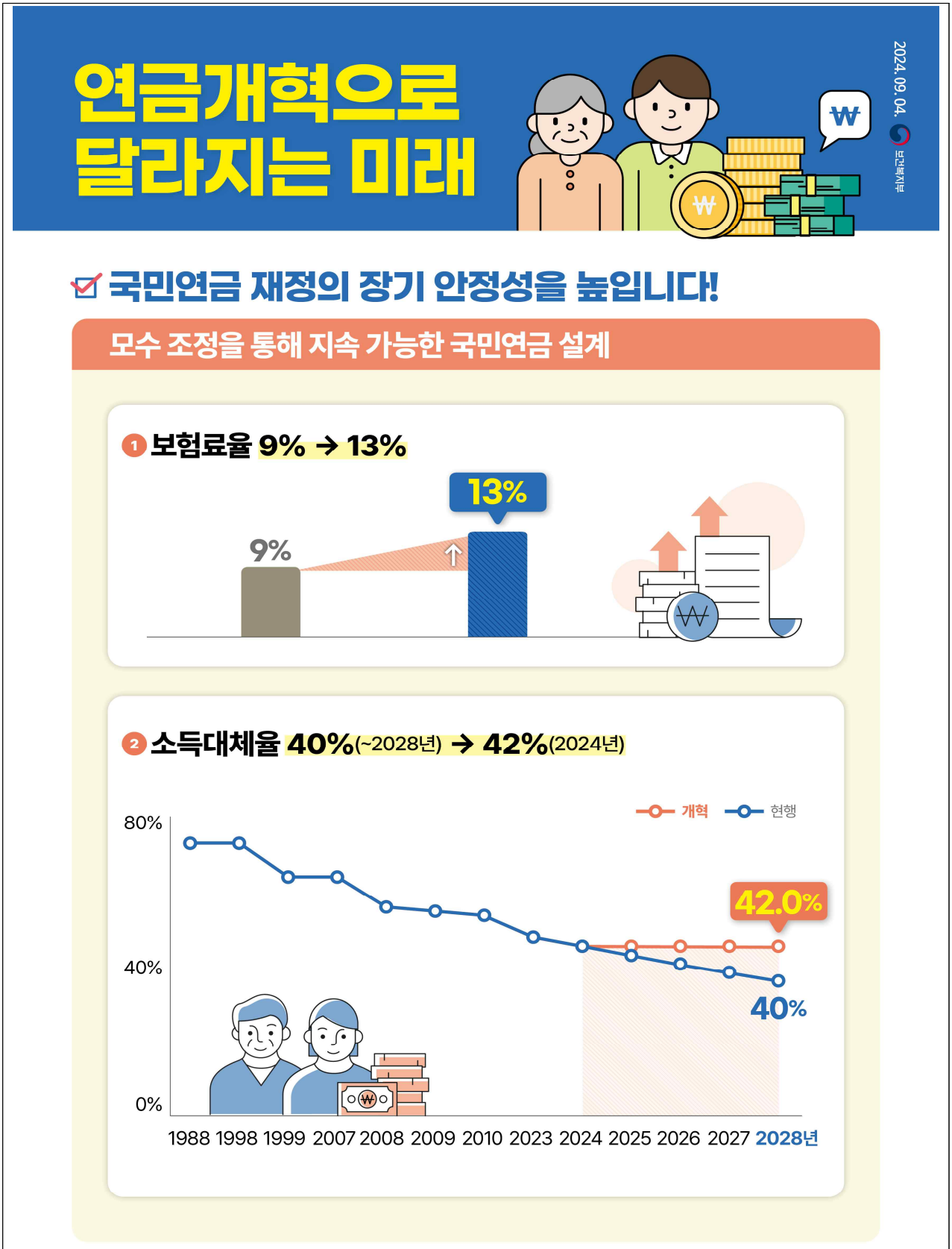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붙임>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별첨> 연금개혁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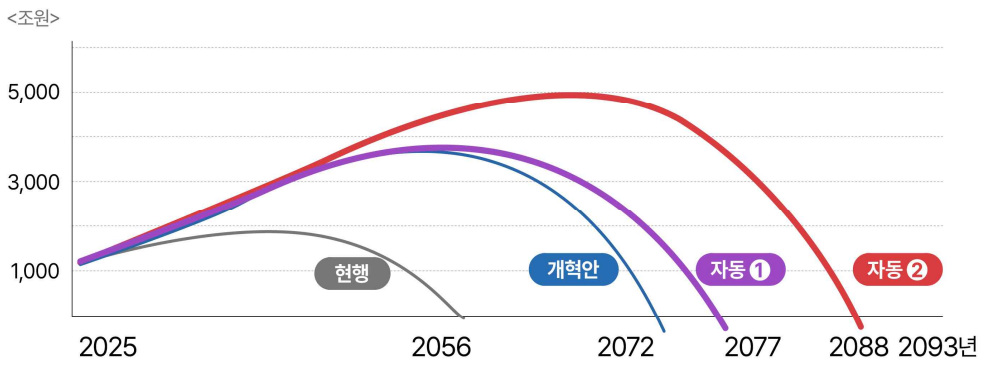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창규	(044-202-36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2-3613)
		담당자	사무관	이효진	(044-202-3601)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02-3609)
<기금운용>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	과장	박민정	(044-202-3650)
		담당자	사무관	신현준	(044-202-3652)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담당자	과장	조승아	(044-202-3670)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044-202-3672)
<급여제도>	연금급여팀	담당자	팀장	박정우	(044-202-3630)
		담당자	사무관	황상철	(044-202-3632)
<공동>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책임자	과장	배성현	(044-215-8590)
		담당자	사무관	송상목	(mok88@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 진	(zin0427@korea.kr)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장	이부용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이상전	(044-202-7657)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장	정선인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2100-26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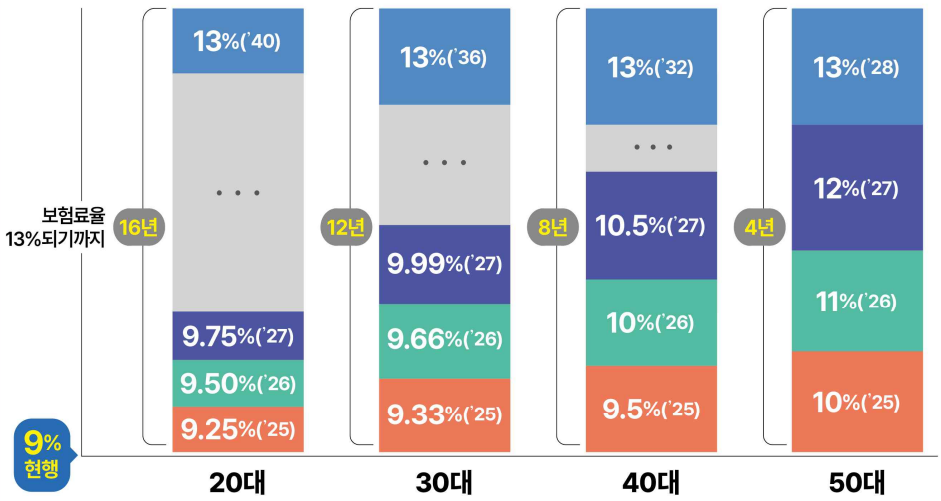
추가 재정안정 조치로 튼튼한 국민연금 마련



- 현　행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개혁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 자동❶ : 개혁안 + 수지적자 시점('54년)부터 조정장치 발동
- 자동❷ : 개혁안 + 급여 지출>보험료 수입 시점('36년)부터 조정장치 발동

☑ 청년 부담은 낮추고 세대 간 형평성은 높입니다!

- 20대 연 0.25%p, 30대 연 0.33%p 40대 연 0.5%p 50대 연 1%p씩 인상



☑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로 실질소득 강화

① 출산크레딧 확대
둘째아부터 ➡
첫째아부터



② 군 크레딧 확대
6개월 ➡
군복무기간 고려



③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2026년 저소득 노인 40만원으로 우선 인상
2027년 **지원대상 전체**



② 빈곤노인 지원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일정비율 추가 지급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의 든든한 지킴이

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 수익률 개선
② 개인연금: 가입·연금화 유도, 수익률 향상

